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7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7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11월 8일)

상정 · 심사 · 원안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13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투자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각 계약당사자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 방식으로,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하고, 적법절차에 따르는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금을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6조).

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하면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되, 해결을 위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180일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도록 함(안 제12조).

바.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분쟁은 가능하면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서면으로 제기된 날부터 180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투자자가 분쟁을 투자유치국인 계약당사자의 국내 구제절차 또는 각종 국제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 2014. 10. 문안 교섭 개시
- 2023. 7. 최종 문안 합의
- 2023. 9. 5. 제37회 국무회의 심의

- 2023. 9. 8. 서명(서울)
- 2024. 8. 13. 제35회 국무회의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 검토의견

가. 협정안의 개요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하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이라 함)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국회 비준동의 사유

동 협정안 제5조제1항¹⁾은 i) 공공목적, ii) 비차별적 방식, iii)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의 지급, iv) 적법절차 준수, 이상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상대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직접수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간접수용)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 수용 시 보상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1) 제5조 수용과 보상

1. 어느 계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이하 “수용”이라 한다)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급할 것, 그리고

라. 적법 절차에 따를 것

살펴보면, 직접수용 시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일반적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데 비해, 간접수용 시 보상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²⁾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간접수용 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동 협정안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³⁾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참고로, 간접수용은 과거 체결된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정부는 제19대 국회 이전까지는 이를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한·독 투자보장협정, 한·일 투자협정)⁴⁾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그러나 제19대 국회부터는 법리(法理)해석을 달리하여 투자보장협정

2)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효용 감소 등의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간접수용에 관한 개별 법률은 있으나, 간접수용 시 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 법률은 없음.

3)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4) ▶ 「한·독 투자보장협정」(1967년 발효)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1964. 5.)에는 동 협정이 당시 헌법 제56조에 해당하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한·일 투자협정」(2003년 발효)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과 달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례 등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투자 자유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음.

상의 간접수용 관련 규정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바, 간접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그렇지 않은 우리 국내법 체계 간에 차이가 있고, 간접수용의 법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개별 법률과도 보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보장협정의 간접수용 관련 규정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다. 주요 내용 검토

1)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들의 투자의	Article 3 Treatment of Investment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in its territory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st-favored-natio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rable.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in its territory to invest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by investors of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내국민대우)나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rable.

협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각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상대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및 ‘상대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내국민대우)나 ‘제3국 투자자’ 및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란 외국투자자에 대해 동종의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내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말하며,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동종의 상황에 있는(like circumstances)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로서, 다른 협정에서 동종의 상황에 있는 제3국의 투

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도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2,61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나, 세르비아는 동유럽 V4 국가(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대비 저렴한 임금 등으로 투자의 매력에 높고, EU 국가로 역내에서는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역외국가에 대해 공통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향후 우리 기업들의 동유럽 시장 내 진출 확대를 위한 세르비아의 경제적 중요성이 큰 상황에서 동 협정안을 통해 양국 간 투자에 대해 상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가 부여될 경우, 향후 우리 기업들이 세르비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수용 및 보상 (안 제5조제1항)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5조 수용과 보상⁵⁾ 1.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다음을 제외하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이하 “수용”이라 한다)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급할 것, 그리고	Article 5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⁵⁾ 1. Neither Contracting Party may expropriate or nationalize an invest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ropriation”), except: (a) for a public purpose; (b)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c) 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라. 적법절차에 따를 것	(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협정안 제5조제1항은 i) 공공목적, ii) 비차별적 방식, iii)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급할 것, iv) 적법절차 준수, 이상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상대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직접수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간접수용⁵⁾)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대다수의 투자보장협정은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수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용에 대한 규정방식은 투자협정마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크게 i) 국가의 규제권한을 존중하는 방식, ii)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 iii) 부속서(Annex)를 두는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동 협정안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어 발효된 ‘한-아르메니아 투자보장협정(2019.10.3. 발효)’,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2018.10.31. 발효)’ 등과 같이 간접수용에서 제외되는 정부조치의 유형을 예시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고 있음.

5)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로서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임.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부속서 I 수용 3. 제5조에서 다루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이나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2) 정부 조치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에 관한 투자자의 기대가 합리적인지는 부분적으로 관련 부문에서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조치의 성격. 관련 고려 사항은 정부 조치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예를 들어,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당한 공공복	Annex I Expropriation 3. The second situation addressed by Article 5 is in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has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a)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i) 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although the fact that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of an investment, standing alone,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ii)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an investor’s expectation regarding governmental regulations is reasonable or not, depends in part on the character and the extent of governmental regulation in relevant sector; and (iii)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including its objectives and context. Relevant considerations could include whether the government action imposes a special sacrifice on the particular investor or investment that exceeds what the investor or investment should be expected to endure for the public interes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지 목적”의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다.	(b)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for example, when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in light of its purpose or effect,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that are designed and appli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and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 For greater certainty, the list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is not exhaustive.

동 협정안의 부속서 I (Annex I) 제3항에서는 간접수용을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단은 i)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ii) 정부 조치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iii)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조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계약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조치를 예로 들어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상황인바,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향후 중재재판부에 회부되었을 때 동 규정이 명확한 판정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방식은 타당하다고 봄.

3)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안 제13조)

협정안 제13조제3항은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 간의 투자분쟁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음.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절차로는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⁶⁾, ICSID 추가절차규칙⁷⁾, UNCITRAL 중재규칙⁸⁾과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 세르비아 투자규모가 세르비아의 우리에게 대한 투자규모보다 훨씬 크고, 세르비아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세르비아의 국내법원 보다는 ICSID 절차를 따르는 것이 재판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강화되어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6) “ICSID협약”이란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을 말하
는바, World Bank 산하 기구인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우리나라와 캐나다포함)에게 ISDS
절차를 제공함.

7) ICSID 추가절차규칙: 양국 중 일방이 ‘ICSID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동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8) 국제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인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을 말함.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혜택의 부인 (안 제16조)

협정안 제16조는 비계약당사자의 인(人)이 직·간접적으로 상대 계약당사자의 기업을 소유·지배하는 경우 및 상대 계약당사자의 기업이 그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협정안에 따른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6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계약당사자는, 비계약당사자의 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혜택을 부인하는 그 한쪽 계약당사자가 그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협정의 혜택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될 수 있거나 우회될 수 있는 조치를 그 비계약당사자 또는 그 비계약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인인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계약당사자는 법인인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법인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Article 16 Denial of Benefits 1. A Contracting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of such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persons of a non-Contracting Party, directly or indirectly, own or control the juridical person and the denying Contract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Contracting Party or a person of the non-Contracting 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juridical person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were accorded to the juridical person or its investments. 2. A Contracting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that juridical person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이와 같은 규정은 투자목적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설립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국 기업이 동 협정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해 부여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다국적 기업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악용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세르비아, 한쪽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국 자본이 동 협정을 이용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혜택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동 협정안에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라. 종합의견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안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 투자분쟁 해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국 기업에 대한 동 협정상의 혜택 부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의 동유럽 시장 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세르비아의 경제적 가치, 향후 우리나라가 세르비아에 대해 주로 투자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르비아에 진

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협정
안에 대한 비준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봄.

문 의 처
02) 6788-5268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2024년 7월 현재 총 100개국 체결
발효 83개국, 종료 12개국(이 중 11개는 FTA 발효로 종료), 미발효 5개국

	지 역 (체결)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1	구주 지역 (35)	독일	1964.2.4.	1967.1.15.	
2		스위스	1971.4.7.	1971.4.7.	2006.9.1. 종료 한-EFTA FTA로 대체 (2006.9.1. 발효)
3		영국	1976.3.4.	1976.3.4.	
4		프랑스	1977.12.28.	1979.2.1.	
5		덴마크	1988.6.2.	1988.6.2.	
6		헝가리	1988.12.28.	1989.1.1.	
7		이탈리아	1989.1.10.	1992.6.26.	
8		폴란드	1989.11.1.	1990.2.2.	
9		러시아	1990.12.14.	1991.7.10.	
10		오스트리아	1991.3.14.	1991.11.1.	
11		터키	1991.5.14.	1994.6.4.	2018.8.1. 종료 한-터키 FTA로 대체 (2013.5.1. 발효)
12		체코	1992.4.27.	1995.3.16.	
13		우즈베키스탄	1992.6.17.	1992.11.20.	
			2019.4.19.	2023.4.5.	
14		리투아니아	1993.9.24.	1993.11.9.	
15		핀란드	1993.10.21.	1996.5.11.	
16		스페인	1994.1.17.	1994.7.19.	
17		그리스	1995.1.25.	1995.11.4.	
18		포르투갈	1995.5.3.	1996.8.11.	
19		타지키스탄	1995.7.14.	1995.8.13.	
20		스웨덴	1995.8.30.	1997.6.18.	
21		카자흐스탄	1996.3.20.	1996.12.26.	
22		라트비아	1996.10.23.	1997.1.26.	
23		우크라이나	1996.12.16.	1997.11.3.	
24		벨라루스	1997.4.22.	1997.8.9.	
25		네덜란드	1974.10.16.	1975.6.1.	개정
			2003.7.12.	2005.3.1.	
26		알바니아	2003.12.15.	2006.5.18.	
27		슬로바키아	2005.5.27.	2006.2.7.	
28		크로아티아	2005.7.19.	2006.5.31.	
29		불가리아	2006.6.12.	2006.11.16.	
30		루마니아	1990.8.7.	1994.12.30.	개정
			2006.9.6.	2008.1.11.	
31		아제르바이잔	2007.4.23.	2008.1.25.	
32		키르기즈스탄	2007.11.19.	2008.7.8.	
33		벨기에 · 룩셈부르크	1974.12.20.	1976.9.3.	개정
			2006.12.12.	2011.3.27.	

	지 역 (체결)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34	아시아 지역 (18)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BIT 없이 FTA만 존재	아르메니아	2018.10.19.	2019.10.3.	
35		세르비아	2023.9.8.	-	
36		스리랑카	1980.3.28.	1980.7.15.	
37		방글라데시	1986.6.18.	1988.10.6.	
38		말레이시아	1988.4.11.	1989.3.31.	
39		파키스탄	1988.5.25.	1990.4.15.	
40		태국	1989.3.24.	1989.9.30.	
41		인도네시아	1991.2.16.	1994.3.10.	
42		몽골	1991.3.28.	1991.4.30.	
43		필리핀	1994.4.7.	1996.9.25.	
44		인도	1996.2.26.	1996.5.7.	2017.5.12. 종료 한-인도 CEPA로 일원화 (2010.1.1. 발효)
45		라오스	1996.5.15.	1996.6.14.	
46		캄보디아	1997.2.10.	1997.3.12.	
47		홍콩	1997.6.30.	1997.7.30.	
48		브루나이	2000.11.14.	2003.10.30.	
49		일본	2002.3.22.	2003.1.1.	
50		베트남	1993.5.13.	1993.9.4.	
			2003.9.15.	2004.6.5.	
51		중국	1992.9.30.	1992.12.4.	개정
			2007.9.8.	2007.12.1.	
52		한·중·일	2012.5.13.	2014.5.17.	
53		미얀마	2014.6.5.	2018.10.31.	
54	아프리카- 중동지역 (28개)	튀니지	1975.5.23.	1975.11.28.	
55		세네갈	1984.7.12.	1985.9.2.	
56		남아공	1995.7.7.	1997.6.6.	
57		이집트	1996.3.18.	1997.5.25.	
58		나이지리아	1998.3.27.	1999.2.1.	
59		이란	1998.10.31.	2006.3.31.	
60		탄자니아	1998.12.18.	-	
61		모로코	1999.1.27.	2001.5.8.	
62		이스라엘	1999.2.7.	2003.6.19.	2022.12.1 종료 한-이스라엘 FTA로 대체 (2022.12.1. 발효)
63		카타르	1999.4.16.	1999.5.16.	
64		알제리	1999.10.12.	2001.9.30.	
65		사우디아라비아	2002.4.4.	2003.2.19.	
66		아랍에미리트	2002.6.9.	2004.6.15.	
67		오만	2003.10.8.	2004.2.10.	
68		쿠웨이트	2004.7.15.	2007.8.31.	
69		요르단	2004.7.24.	2004.12.25.	
70		부르키나파소	2004.10.26.	2010.4.14.	

	지 역 (체결)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71		모리타니아	2004.12.15.	2006.7.21.	
72		콩고민주공화국	2005.3.17.	-	
73		레바논	2006.5.5.	2006.12.21.	
74		리비아	2006.9.21.	2007.3.28.	
75		콩고공화국	2006.11.8.	2011.8.13.	
76		모리셔스	2007.6.18.	2008.3.7.	
77		가봉	2007.8.10.	2009.8.9.	
78		르완다	2009.5.29.	2013.2.16.	
79		짐바브웨	2010.5.24.	2021.4.7.	
80		카메룬	2013.12.24.	2018.4.13.	
81		케냐	2014.7.8.	2017.5.3.	
82	미주 지역 (19개) *미국, 캐나다는 BIT없이 FTA만 존재	파라과이	1992.12.22.	1993.8.6.	
83		페루	1993.6.3.	1994.4.20.	2011.8.1. 종료 한-페루 FTA로 대체 (2011.8.1. 발효)
84		아르헨티나	1994.5.17.	1996.9.24.	
85		브라질	1995.9.1.	-	
86		볼리비아	1996.4.1.	1997.6.4.	2019.6.4. 종료
87		칠레	1996.9.6.	1999.9.16.	2004.4.1. 종료 한-칠레 FTA로 대체 (2004.4.1. 발효)
88		엘살바도르	1998.7.6.	2002.5.25.	2020.1.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2020.1.1. 발효)
89		니카라과	2000.5.15.	2001.6.22.	2019.10.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2019.10.1. 발효)
90		과테말라	2000.8.1.	2002.8.17.	
91		코스타리카	2000.8.11.	2002.8.25.	2019.11.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2019.11.1. 발효)
92		온두라스	2000.10.24.	2001.7.19.	2019.10.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2019.10.1. 발효)
93		멕시코	2000.11.14.	2002.6.27.	
94		파나마	2001.7.10.	2002.2.8.	2021.3.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95		트리니다드 토바고	2002.11.5.	2003.11.27.	
96		자메이카	2003.6.10.	2007.11.5.	
97		도미니카	2006.6.30.	2008.6.10.	
98		가이아나	2006.7.31.	2006.8.20.	
99		우루과이	2009.10.1.	2011.12.8.	
100		콜롬비아	2010.7.6.	-	

【참고자료 2】 세르비아 개황자료

□ 일반사항

- 국명 : 세르비아공화국(Republic of Serbia)
- 수도 : 베오그라드(169만 명)
- 인구 : 664만 명
- 면적 : 77,612km²(코소보 포함시 88,499km²)
- 종교 : 세르비아정교(85%), 천주교(5%), 회교(3%) 등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대통령 직선, 임기 5년)
- 주요인사
 -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SNS, 2017.5 취임, 2022.4월 재선)
 - 총리: 밀로쉬 부체비치(Miloš Vučević, SNS, 2024.5)
 - 외교장관: 마르코 주리치(Marko Đurić, SNS, 2024.5)
- 의회구성(총 250석 / 단원제 임기 4년 / '23.12월 총선)
 - 원내 진출 주요 정당 의석수:
세르비아혁신당(SNS) 연합 129석, 정당연합 'Serbia against Violence' 65석, 세르비아사회당(SPS) 연합 18석 등

□ 최근정세

(정치)

- 1989. 유고 내전 발발
- 1991.6-1992.3.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리 독립
- 2006.6 몬테네그로 분리 독립
- 2008.2 코소보 독립 선언(3.28 한국의 코소보 승인)
- 2008.4 EU 가입을 위한 안정화제휴 협정 체결
- 2012.3 EU 가입후보국 지위 획득
- 2014.1 EU 가입을 위한 분야별 협상 개시
- 2018.11 코소보의 세르비아산 수입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조치로 코소보와의 관계정상화 협상 중단
- 2020.6 코소보 신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 철회로 관계정상화 협상 재개 및 중단 반복
- 2022.4 대선 및 총선 결과 부치치 대통령 재임 및 집권 연장 승리
- 2024.5 총선(2023.12) 결과 신정부 출범

(경제)

- 1990년대 유고내전, UN 경제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이후 적극적 경제개혁을 통해 2004-2008년간 연평균 4.6%의 실질 GDP 성장을 달성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2011-2015년간 1.0% 미만대의 부진한 GDP 성장을 시현
- 2018년 IMF 정책조정자문(PCI) 프로그램으로 공적부채 감소, 물가상승률 통제 등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
- 지속적인 재정부양책 및 경제구조 개혁 노력으로 2018-19년 연평균 4%대 경제성장률 유지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2020년 -1% 역성장에도 그쳤으며, 이후 경제 조기 회복에 성공, 2021년 7.4% 성장률 기록

□ 경제현황(2023, IMF, 세르비아 통계청)

- GDP : 751.9억불
- 1인당 GDP : 11,330불
- 경제성장률 : 2.5%
- 물가상승률 : 12.5%
- 실업률 : 9.45%
- 교역 : 707억불 (수출 309억불, 수입 398억불)
- 화폐단위 : Dinar(RSD) (1\$=102.96Dinar)
- 주요자원 : 석탄, 구리, 금, 납, 자다라이트(리튬) 등
 - 자다라이트는 리튬의 원석으로 세르비아 아다르(Jadar) 지역에서 2007년 최초 발견되었으며, 리튬 추출시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89.12 외교관계 수립(12.27)
- 1998.06 주유고대사관 폐쇄(주루마니아대사관 겸임)
- 1999.03 주한 유고대사관 폐쇄(주일 유고대사관 겸임)
- 2002.03 주유고대사관 재개설
- 2004.11 주한세르비아대사관 재개설
- 코소보 승인 문제로 주한대사 일시 소환('08.3월) 및 복귀('08.10월)
- 공관장
- 주세 대사 : 이재웅('21.12-) / 주한 대사 : Nemanja Grbić('22.2-)
- 교역현황 : 총 3.92억 미불(2023, 한국무역협회)
 - 對세르비아 수출 2.70억 미불 (반도체, 가구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등)
 - 對세르비아 수입 1.22억 미불 (곡식류(옥수수),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등)
- 투자현황(~2023, 누계 신고액 기준)
 - 對세르비아 투자 : 26.1백만불(20건)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對한국 투자 : 0.2백만불(2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인사 교류

(방문)

- '06.10월 임채정 국회의장
- '09. 2월 신각수 외교차관
- '09. 9월 대통령 특사(나경원 의원 등)
- '15. 4월 최중문 장관특보(유네스코세계유산)
- '15.12월 김재홍 KOTRA사장(무역관 개설)
- '17. 2월 김동국 인사혁신처장
- '17.12월 조현 외교차관
- '18. 3월 박주선 국회부의장, 조정태 국회 기재위원장
- '18.12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 '19. 3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 '19. 6월 강경화 외교장관
- '19.10월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제141차 IPU회의 참석)
- '22.10월 김영주 국회부의장
- '23. 4월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대통령특사자격)

(방한)

- '02.11월 Svilanović 외교장관
- '10. 6월 **Cvetković 총리**
- '10. 9월 Dinkić 부총리 겸 경제·지역개발부장관
- '12.12월 Karadjordjović 왕세자
- '13. 7월 Marinković 국회부의장
- '16. 3월 Udovički 부총리 겸 행정부장관(전자정부협력)
- '17. 6월 Rončević 인제관리청장
- '17. 8월 Mali 베오그라드시장
- '17.11월 Vujić 외교부 정무총국장 겸 대통령특사
- '17.11월 Šarčević 교육과학기술개발부장관
- '18. 9월 Trivan 환경보호부장관
- '19.12월 Gojković 국회의장
- '21.11월 Maja Mačuzić Puzić 행정자치부차관
- '22. 9월 Bogdan Igic 농업삼림부차관
- '23. 9월 **Ana Brinabić 총리**
- 동포현황(2023) : 144명

□ 북한과의 관계

- 1948.10 외교관계 수립
- 1962.10 외교관계 단절(유고 코민포름 탈퇴)
- 1971.9 외교관계 복원
- 2001.10 양국, 상주 대사관 폐쇄 합의
- 북한은 주루마니아 대사관, 세르비아는 주중 대사관 겸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원안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
호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채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쪽 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한쪽 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 사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들을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증진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증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란 한쪽 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고, 그러한 투자는 그 한쪽 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기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와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투자를 유치한 채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서 주식회사, 트러스트, 파트너십, 개인기업, 지점, 합작투자, 협회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나. 주식, 증권 및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부채 증서 및 대부

라. 선물, 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마.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에서 해당 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체결된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 공유, 민관 파트너십 및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대부 계약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금전 청구권

사. 지식재산권

아.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면허, 인가, 허가 및 유사한 권리, 그리고

자.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 점유율, 시장 접근, 기대 이득 및 이윤 창출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이 협정의 목적상, “투자”란 다음을 말하지 않는다.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 다만, 그것이 투자의 성격을 지닌 대부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기재된 명령 또는 판결

어느 자산이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투입, 이득이나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자산이 투자된 형태의 변화는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투자자”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란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실효적인 국적의 국가의 국민으로만 본다. 그리고

나. “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법인화되거나 설립된 회사, 공공기관, 정부기관, 재단, 파트너십, 상사, 단체, 기관, 주식회사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

3. “수익”이란 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유사한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 “영역”이란,

가. 세르비아공화국에 관해서는, 세르비아공화국이 국내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말한다.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역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역을 말한다.

5.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에 따라 결정하는 통화를 말한다.

6.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질을 지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모든 은행서비스와 그 밖의 금융서비스, 그리고 금융적 성질의 서비스에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 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 제2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 기준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해야 할 대우의 최소 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이거나 그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제2항의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체계에 구현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사법을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제2항의 의무는 각 계약당사자가 국
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 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 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
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5. 어느 계약당사자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 유지, 사
용, 향유 및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며,
국내산 사용, 기술이전 또는 수출이행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
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이하 “내국
민대우”라 한다)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이
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들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
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내국민대우)나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
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다음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 지원 대부,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한쪽 계약당사자가 제공하
는 보조금 또는 무상 지원금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최혜국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그러한 동맹이나 그 밖의 형태의 지역적 협력을 설립하는 유사한 국제 협정이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와 관련된 국제 협정 또는 약정에 대한 자국의 현재 또는 미래의 회원국 지위나 참여를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않는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최혜국대우는 이 협정 제13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손실 보상

1.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나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자신의 투자에 손실을 입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이나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제1항에서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을 입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이나 보상 또는 적절한 경우에 두 가지 모두를 받는다. 보상은 제5조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않았거나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구되지 않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파괴

제5조 수용과 보상

1. 어느 계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이하 “수용”이라 한다)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급할 것, 그리고

라. 적법 절차에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급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 가치와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완전히 현금화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공정한 시장 가치가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 가치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4. 공정한 시장 가치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급일에 지배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지급 통화로 환산된,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가. 수용일의 지배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 가치, 그리고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수용으로 영향을 받은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자신의 투자의 가치 산정에 대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의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에 따라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7. 이 조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따라 해석된다.

제6조

송금

1.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금의 자국 영역 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 금액

나. 투자로부터 발생한 금액.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와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 대부를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된 지급금

라.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이나 청산으로부터 발생한 대금

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급금

바. 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에서 발생하는 지급금, 그리고

사. 투자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고용된 인력의 임금과 그 밖의 보수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투자가 이루어진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송금 당일의 지배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진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계약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자국의 조치 및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의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이나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당국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

에 대한 재무 보고 또는 기록 보존, 또는
마. 사법 절차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4. 한쪽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의 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쪽 계약당사자가 그러한 조치를 연장해야 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연장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다른 쪽 계약당사자와 조율한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부합한다.

다. 비차별적이다.

라. 이 조 제4항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마.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제거된다.

바. 몰수적이지 않다.

사.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된다.

아.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자.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7조

대위변제

1.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 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

약에 따라 변제한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가. 그러한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한쪽 계약당사자나 그 지정 기관에 양도되는 것, 그리고

나. 그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 기관이 대위변제로 그러한 권리와 청구권을 이전의 명의 보유자와 동일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범위에서, 그러한 권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3. 이 협정 제6조는 대위변제로 투자자의 권리와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 기관에 적용된다.

제8조

투명성

1. 각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협정과 자국의 법령, 절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결 및 사법 결정을 신속히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쪽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이나 이 항에서 제시된 다른 수단으로 표명되지는 않았으나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이를 신속히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특정한 질문에 신속히 응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한쪽 계약당사자가 오로지 정보 수집이나 통계의 목적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해당 투자와 관련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한쪽 계약당사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가. 특정한 투자자 또는 투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거나 비밀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배될 수 있거나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비밀이나 독점적 정보

제9조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인 자연인과 그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고용한 인력이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제10조

보건, 안전 및 환경 조치

계약당사자는 보건,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국내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한쪽 계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에서 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탈하는 것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계약당사자가 승인하거나 지지한 원칙 성명서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그들의 관행과 내부 정책에 포함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원칙은 노동, 환경, 인권 및 반부패와 같은 사안을 다룬다.

제12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하면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해결을 위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180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 그러한 임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계약당사자는 중재를 위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내에 임시 중재판정부의 구성원 1명을 임명한다. 이러한 2명의 구성원은 제3국의 국민 1명을 선정하고, 그들 양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받아 임시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임시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명의 구성원의 임명일부터 60일 내에 임명된다.

4. 이 조 제3항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거나 달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자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임시 중재판정부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6. 임시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 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임시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

용은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임시 중재판정부는 자체 결정으로써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양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3조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이 조는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으로서, 그 한쪽 계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주장되는 분쟁에 적용된다.

2. 이 조는 이 협정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그러한 분쟁은 가능하면 교섭 또는 협의로 해결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 요청으로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180일 내에 교섭 또는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이 조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다음에 회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자국 영역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나. 이 조에 따라 다음에 따른 중재

-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 2)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추가적 절차 규칙(“ICSID 추가절차규칙”)이 적용 가능한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
- 3)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임시 중재판정부, 또는
- 4) 양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 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 규칙

다. 계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규칙(유엔문서 A/CN.9/783)(“UNCITRAL 투명성 규칙”)은 제13조

제3항나호3)에 따라 개시되는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각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에 따른 동의와 청구의 중재 회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관한 ICSID 협약 제2장(본부의 관할권)과 ICSID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나. “서면합의”를 위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2조

5. 투자자가 분쟁당사자인 계약당사자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나 제3항에서 규정된 중재 절차 중 하나에 분쟁을 회부하면, 그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6. 이 조에 따른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손해 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잠정적인 구제를 사법재판소 또는 행정재판소에 구하는 것은 이 조 제5항에 따른 한쪽 계약당사자의 동의의 제한의 목적상,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회부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 조 제3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중재에서 허용된다.

7. 분쟁은 분쟁당사자인 계약당사자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의향서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 주소 및 설립지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청구하는 손해 배상의 대략적 금액을 포함하여, 구하는 구제

8. 분쟁은 투자자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인지했어야 한 날부터 3년 내에 중재에 회부된다.

9. 이 조 제3항의 두 번째 문장의 규정은 제18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이 조 제3항

에 따른 중재의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18조를 원용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피청구국은 이 조에 따른 중재의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내에 제18조가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에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양 계약당사자가 설치한 임시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피청구국은, 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판정부에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중재는 그 청구에 대하여 라호에서 규정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나. 임시 공동위원회는 제18조에서 언급된 항변을 원용하는 피청구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며, 양 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다. 임시 공동위원회는 가호에서 기술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그러한 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그리고 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판정부에 신속히 전달된다. 그 결정은 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라. 임시 공동위원회가 가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에 가호에서 기술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판정부는 임시 공동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한다.

마. 가호에서 언급된 중재는 임시 공동위원회의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중지되며 그 청구에 대하여,

- 1) 분쟁당사자가, 그리고 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판정부가 임시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 후 10일째 되는 날, 또는
- 2) 라호에서 임시 공동위원회에 주어진 90일의 기간이 만료한 후 10일째 되는 날에 진행될 수 있다.

10. 분쟁당사자는 이 조 제3항나호에 따른 적용 가능한 중재 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지가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의 영역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11. 한쪽 계약당사자는 주장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 반소,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떤 사유로도 주장하지 않는다.

12. 중재판정부는 관정에서 법과 사실의 판단, 그리고 결정에 대한 사유를 함께 명시하며,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제를 제시할 수 있다.

- 가. 계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선언
- 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상이 지급된 또는 지급될 날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금전적 보상
- 다. 적절한 경우에 현물 원상회복. 다만, 피청구 계약당사자의 선의의 판단에 따라 현물 원상회복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 라.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그 밖의 형태의 구제

13.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판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다른 규칙의 적용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나 이 협정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확립될 국제법에 따른 의무가, 일반적이든 특정적이든,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것 이상으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이 협정보다 유리한 범위에서 이 협정에 우선한다.

제15조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이 협정의 발효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투자에 대하여 발효일부터 적용된다.

2. 협정은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제기된 청구 또는 협정의 발효 전에 해결된 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6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계약당사자는, 비계약당사자의 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혜택을 부인하는 그 한쪽 계약당사자가 그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협정의 혜택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될 수 있거나 우회될 수 있는 조치를 그 비계약당사자 또는 그 비계약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인인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계약당사자는 법인인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법인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7조

협정의 해석

계약당사자 간 또는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에 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해석을 발표한다.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이 협정의 해석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설립되는 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8조

금융서비스에 관한 예외

1.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계약당사자는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나 금융기관에 수탁의무를 부여한 인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건전성을 이유로 하는 조치 또는 금융시스템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그 계약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통화정책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계약당사자는 금융기관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의한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그 기관 또는 공급자의 계열사나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한쪽 계약당사자가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이 협정의 어떤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조치 또는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그러한 조치가 유사한 여건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를 것으로 한다.

제19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나.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의 밀거래와 관련되고 군사 시설 또는 그 밖의 안보 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밖의 제품, 재료, 서비스 및 기술의 밀거래 및 거래와 관련된 조치
- 2) 전시에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상황에서 실시되는 조치, 또는
- 3)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의 비확산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나 국제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

다. 계약당사자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20조

과세

1. 이 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 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과세 조치와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제 5 조는 모든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과세 조치가 수용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 12 조 또는 제 13 조에 따른 중재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그 청구인이 우선 양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조세 당국에 서면으로 그 과세 조치가 수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회부한 경우, 그리고

나. 그러한 회부일 후 180 일 내에 양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조세 당국이 그 과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3. 이 조의 목적상 “권한 있는 조세 당국”이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이고, 세르비아공화국에 대해서는 재무부, 세무서이다.

4.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조세 협약에 따른 각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불일치의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계약당사자 간 조세 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단독 책임이 있다.

제21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결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는 어느 한쪽 체결당사자가 다른 쪽 체결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는 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5년의 추가 기간 동안 유효하다.

4. 협정은 체결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 협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부과된 권리나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시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8일 서울에서 한국어, 세르비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르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

수용

채약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한쪽 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는 그 조치가 투자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5조는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 명의의 공식적 이전이나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5조에서 다루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 한쪽 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이나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한쪽 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1)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한쪽 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 2) 정부 조치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에 관한 투자자의 기대가 합리적인지는 부분적으로 관련 부문에서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조치의 성격. 관련 고려 사항은 정부 조치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예를 들어,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한쪽 채약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다.

4. 간접수용의 개념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부합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규제 권한의 행사로 채택된 정부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부속서 2

과세와 수용

과세 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부속서 1에서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그 투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가.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세 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한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 조치의 부과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 원칙 및 관행에 부합하는 과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히, 과세 조치의 회피 또는 탈세를 막기 위한 과세 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 조치와는 달리,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 조치가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 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СПОРАЗУМ
ИЗМЕЂУ
ВЛАДЕ РЕПУБЛИКЕ КОРЕЈЕ
И
ВЛАДЕ РЕПУБЛИКЕ СРБИЈЕ
О ПОДСТИЦАЊУ И ЗАШТИТИ УЛАГАЊА**

Влада Републике Кореје и Влада Републике Србије (у даљем тексту: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У жељи да створе повољне услове за већа улагања од стране улагача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засноване на принципима равноправности и узајамне користи,

Препознајући да ће подстицање и заштита улагања на основ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допринети унапређењу индивидуалних пословних иницијатива и побољшати просперитет у обе државе, и

У жељи да се ови циљеви остваре на начин који је у складу са заштитом здравља, безбедности и животне средине и подстицање заштите потрошача и међународно признатих права радника, узимајући у обзир потребу да се обезбеди постизање легитимних владиних циљева за подстицање одрживог развоја;

Споразумеле су се о следећем:

Дефиниције

Члан 1.

У смисл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1. „улагање” значи сваку врсту имовине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у власништву или под контролом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под условом да је улагање извршено у складу са њеним законима и прописима и обухвата посебно, мада не и искључиво следеће облике:

- (а) привредно друштво (правно лице или други субјект основан и организован у складу са националним прописима држав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без обзира да ли је основано ради остваривања профита или не, као и без обзира да ли је у приватном или државном власништву или је контролисано од стране државе, и обухвата корпорације, трустове, партнерство, предузетништво, огранак, заједнички подухват, удружење или организацију);
- (б) удео, акције и друге облике учешћа у привредном друштву;
- (ц) обвезнице, менице и друге дужничке хартије од вредности и зајмове;

- (д) фјучерсе, опције и друге деривате;
- (е) кључ у руке, изградња, управљање, производња, концесије, подела прихода, јавно-приватно партнерство и друге сличне уговоре закључене у складу са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држав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на чијој територији се врши улагање;
- (ф) новчана потраживања повезана са улагањем по основу уговора о кредиту;
- (г) права интелектуалне својине;
- (х) лиценце, одобрења, дозволе и слична права додељена у складу са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 (и) другу материјалну и нематеријалну, покретну и непокретну имовину и повезана стварна права, као што су закуп, хипотека, јемство и залога. За већу сигурност, удео на тржишту, приступ тржишту, очекивани добитак и могућност за остваривање профита нису сами по себи улагање;

У смисл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израз „улагање” не значи:

- (а) новчано потраживање које проистиче искључиво из комерцијалне продаје робе и услуга, осим ако је реч о зајму који има карактеристике улагањ
- (б) налог или пресуда донета у судском или управном поступку.

Да би се сматрала улагањем, имовина мора имати карактеристике улагања, као што је ангажовање капитала или других средстава, очекивање остваривања добити или користи или преузимање ризика.

2. Израз „улагач” значи свако физичко и правно лице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је улаже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 (а) физичко лице је лице које има држављанство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у складу са њеним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Физичко лице које има двојно држављанство, сматраће се држављанином државе о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чије је држављанство доминантно и ефективно; и
- (б) правно лице је било које лице, основано ради остваривања профита или не, као што су привредно друштво, јавна установа, орган, фондација, партнерство, фирма, организација, корпорација или удружење основано или на други начин организовано у складу са законима и прописима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т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3. Израз „приходи” значи новчани износ који доноси улагање и обухвата,

посебно, али не и искључиво, профит, капиталну добит, дивиденду, камату, накнаду по основу права интелектуалне својине и друге сличне накнаде које произилазе из улагања.

4. Израз „територија” значи:

(а) У односу на Републику Србију:

Територију над којом Република Србија врши суверена права и јурисдикцију у складу са својим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и међународним правом.

(б) У односу на Републику Кореју:

Копнени, поморски и ваздушни простор над којим Република Кореја има суверенитет, и поморска подручја, укључујући морско дно и подземље у близини и изван спољне границе територијалног мора над којим Република Кореја може вршити суверена права или јурисдикцију у складу са својим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и међународним правом.

5. „слободна конвертибилна валута” значи било која валута коју Међународни монетарни фонд одређује у складу са одредбама Статута Међународног монетарног фонда и његових амандмана.

6. „финансијска услуга” значи било коју услугу финансијске природе. Финансијска услуга обухвата све врсте осигурања и услуга у вези са осигурањем, банкарске и друге финансијске услуге, као и споредну и помоћну услугу финансијске природе.

Подстицање и заштита улагања

Члан 2.

1.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подстицати и стварати повољне услове за улагаче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да улажу на територији њене државе и дозвољаваће таква улагања у складу са својим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2.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у односу на улагања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гарантовати, у складу са међународним обичајним правом, правичан и једнак третман и пуну заштиту и безбедност на територији њене државе.

3. Ради веће сигурности, став 2. овог члана прописује минимални стандард међународног обичајног права као минимални стандард поступања према странцима који се даје улагањима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нцепти „правичног и једнаког третмана” и „пуне заштите и безбедности” додатно не захтевају третман који је повољнији од онога који се захтева тим стандардом и њиме се не стварају додатна материјална права. Обавезе из става 2. обезбеђују:

- (а) „правичан и једнак третман” који обухвата обавезу да се не ускраћује правда у кривичним, грађанским 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им судским поступцима у складу са принципом правилног поступања који је садржан у главним правним системима света; и
- (б) „пуну заштиту и безбедност” који захтева од свак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да обезбеди ниво заштите политике, у складу са међународним обичајним правом.

4. Утврђивање да ли је дошло до повреде друге одредбе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или другог међународног споразума не представља повреду овог члана.

5. Ниједн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неће предузимати било какве неразумне и дискриминаторне мере усмерене на управљање, одржавање, коришћење, уживање и располагање улагањем од стране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ли наметати неразумне или дискриминаторне мере на улагања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је се односе на одлуке локалне самоуправе, трансфер технологије, или захтеве извозних перформанси.

Третман улагања

Члан 3.

1.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на територији своје државе обезбедити улагачим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у погледу управљања, одржавања, коришћења, уживања и располагања улагањем, третман који је једнако повољан као третман који се обезбеђује, у датим околностима, улагачима своје државе (у даљем тексту: национални третман) или улагањима улагача трећих држава (у даљем тексту: третман најповлашћеније нације), зависно од тога који је повољнији.]

2.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у складу са њеним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обезбедити на територији своје државе, улагањим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у погледу управљања, одржавања, коришћења, уживања или располагања њиховим улагањима, третман који је једнако повољан као третман који додељује улагањима улагача своје државе (национални третман) или улагањима улагача трећих земаља (третман најповлашћеније нације), зависно од тога који је повољнији.

3. Национални третман и третман најповлашћеније нације из ст. 1. и 2. овог члана не примењује се на:

(а) јавне набавке; или

(б) субвенције или зајмове, укључујући владину кредитну подршку, гаранције и осигурање.

4. Третман најповлашћеније нације из ст. 1. и 2. овог члана не односи се на привилегије које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обезбеђује улагачима трећих држава у оквиру свог садашњег или будућег чланства или повезаности у царинској или економској унији, монетарној унији, на заједничком тржишту или зони слободне трговине или на основу сличног међународног споразума којим се оснивају овакве уније или други облици регионалне сарадње или на основу међународног споразума или аранжмана који се у целости или делимично односе на опорезивање.

5. Ради веће сигурности, третман најповлашћеније нације из ст. 1. и 2. овог члана не примењује се на члан 13.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Накнада губитака

Члан 4.

1.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на територији чије државе улагачи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претрпе штету, услед рата или другог оружаног сукоба, ванредног стања, побуне, нереда, устанка или друге сличне ситуације, обезбедиће у погледу накнаде, обештећења, повраћаја или другог начина накнаде штете, улагачим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третман који је једнако повољан као третман који т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даје улагачима своје државе или улагачима било које треће државе.

2. Независно од одредбе става 1. овог члана, улагачима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ји, у било којој од ситуација наведених у том ставу, претрпе штету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ја је последица:

(а) заплене имовине која им припада, од стране надлежних орган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ли

(б) уништавања њихове имовине од стране надлежних орган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а које није последица оружаног сукоба и није било неопходно услед настале ситуације,

обезбедиће се повраћај или надокнада, или обоје, за претрпљену штету. Правична и одговарајућа накнада обезбедиће се без одлагања, у складу са чланом 5. овог споразума, *mutatis mutandis*.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Члан 5.

1. Улагања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било кој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неће бити експроприсана или национализована, директно или индиректно мерама по дејству једнаким национализацији или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и (у даљем тексту: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осим:

(а) у јавном интересу;

(б) на недискриминаторној основи;

(ц) уз одговарајућу надокнаду која ће се извршити без одлагања; и

(д) у складу са законом.

2. Накнада из става 1. овог члана ће бити:

(а) исплаћена без одлагања;

(б) једнака тржишној вредности експроприсаног улагања каква је била непосредно пре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е (датум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е);

(ц) без утицаја на било какву промену вредности која се догодила јер је намераван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била позната раније; и

(д) ефикасно реализована и слободно преносива.

3. Ако је тржишна вредност умањена у конвертибилној валути, надокнада из става 1. тачка (ц) овог члана неће бити мања од тржишне вредности на дан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е, уз разумну комерцијалну камату, обрачунату од дан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е до дана плаћања.

4. Ако је тржишна вредност умањена у валути која није конвертибилна, надокнада из става 1. тачка (ц) овог члана претворена у валуту плаћања, по тржишном курсу који преовлађује на дан плаћања, неће бити мања од:

- (а) тржишне вредности, претворене у конвертибилну валуту по тржишној стопи која преовлађује на дан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е, и
- (б) камате, по комерцијално разумној стопи за ту слободну конвертибилну валуту, обрачунату од дана када је извршен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до дана плаћања.

5. Оштећени улагач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ма право на хитно решавање његовог предмета од стране судског или другог независног орган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 на вредновање његовог улагања у складу са принципима наведеним у овом члану.

6. Овај члан се не односи на издавање обавезних дозвола за права интелектуалне својине у складу са Споразумом о трговинским аспектима права интелектуалне својине Светске трговинске организације (ТРИПС Споразум).]

7. Овај члан ће се тумачити у складу са Анексима уз овај споразум.

Трансфери

Члан 6.

1.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гарантовати улагачим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слободан трансфер новчаних износа који се односе на њихова улагања, на и са територије њене државе. Ови трансфери обухватају посебно, мада не искључиво:

- (а) уложени капитал и додатна средстава за одржавање или повећање уложених средстава;
- (б) средства добијена од улагања и, обухватају посебно, мада не искључиво добит, камату, капиталну добит, дивиденду, накнаду за ауторска права и друге накнаде;
- (ц) плаћања извршена на основу уговора, укључујући уговоре о кредиту;
- (д) приходе од укупне или делимичне продаје или ликвидације улагања;
- (е) износе накнада исплаћених на основу чл. 4. и 5. овог споразума;
- (ф) плаћања на основу одлука проистеклих из решавања спорова у смисл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г) зараде и друге накнаде запослених у вези са улагањем.

2. Сви трансфери из овог споразума се врше у конвертибилној валути, без ограничења и одлагања, по званичном курсу који се примењује на дан трансфера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где се улагање реализује.

3. Независно од ст. 1. и 2. овог члан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на основу својих националних закона, у доброј вери и на праведан и недискриминаторан начин, одложити или спречити трансфер у вези са:

- (а) ликвидацијом, стечајем или заштитом права поверилаца;
- (б) издавањем, трговином или пословањем са хартијама од вредности;
- (ц) кривичним или прекршајним казнама;
- (д) финансијским извештавањем или чувањем евиденција о трансферима, када је неопходно ради помоћи у спровођењу закона или помоћи финансијским институцијама, или
- (е) обезбеђењем извршења налога или пресуда у судском или управном поступку.

4.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усвојити или наставити да примењује мере које нису у складу са њеним обавезама из ст. 1. и 2. овог члана:

- (а) у случају озбиљног поремећаја платног биланса и спољних финансијских тешкоћа или њиховог превазилажења; или
- (б) у случају када, под изузетним околностима, кретање капитала узрокује или може да проузрокује озбиљне тешкоће по макроекономско управљање, посебно монетарну политику и политику девизног курса.

5. Мере наведене у ставу 4. овог члана:

- (а) неће трајати дуже од годину дана, осим ако, у изузетним ситуацијама, једн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намерава да продужи дејство ових мера, о чему ће унапред консултовати другу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у погледу предложеног продужења мере и начина њене примене;
- (б) биће у складу са одредбама Статута Међународног монетарног фонда;
- (ц) неће бити дискриминаторне;
- (д) неће премашити обим који је неопходан да би се превазишле околности утврђене у ставу 4. овог члана;
- (е) биће привремене и престаће чим то дозволе услови;

- (ф) неће имати за циљ заплону;
- (г) без одлагања ће бити саопштене другој Страни уговорници;
- (х) неће конституисати двоструки или вишеструки девизни курс;
- (и) неће ограничити плаћање или трансфер за текуће трансакције, осим ако је увођење мере у складу са процедурама садржаним у одредбама Статута Међународног монетарног фонда; и
- (ј) неће ограничавати плаћање или трансфер у вези са директним страним улагањем.

Пренос права

Члан 7.

1. Ако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или овлашћена институција њене државе изврши свом улагачу плаћање по основу обештећења, гаранције или уговора о осигурању коју је дала за улагање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друг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признати:

- (а) суброгацију свих права и потраживања улагача т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ли овлашћене институције њене државе; и
- (б) право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ли овлашћене институције њене државе да на основу суброгације остварује таква права или реализује таква потраживања у истој мери као обештећени улагач.

2. Улагачу из става 1. овог члана биће онемогућено да врши права и потраживања у висини која произлазе из суброгације.

3. Суброгација у права и обавезе осигураног улагача односи се и на трансфер плаћања који се врши у складу са чланом 6. овог споразума.

Транспарентност

Члан 8.

1.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обезбедити да се национални закони, прописи, процедуре, опште управне и судске одлуке, као и међународни споразуми који могу утицати на примен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благовремено објављују или на други начин учине јавно доступним. Кад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утврђује

политику која није уређена законима, прописима или на други начин наведен у овом ставу, а може утицати на примен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обезбедиће њено објављивање или је на други начин учинити јавно доступном.

2.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без одлагања одговорити на одређено питање и, по захтеву, обезбедити информацију другој Страни уговорници у погледу материје из става 1. овог члана.

3. Одредбе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не спречавају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да захтева од улагача или улагањ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да обезбеди информације у вези са улагањем искључиво за информативне или статистичке сврхе. Овај споразум не обавезује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да достави или дозволи приступ:

- (а) информацијама у вези финансијских послова и рачуна појединих клијената, одређених улагача или улагања; или
- (б) поверљивој или власничкој информацији, укључујући информацију која се тиче одређеног улагача или улагања чије би објављивање ометало спровођење закона или је у супротности са законима којима се штити поверљивост информација или би угрозила легитимне пословне интересе одређеног привредног друштва или појединца.

Улазак и боравак особља

Члан 9.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у складу са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којим се уређује улазак и боравак странаца, дозволити физичким лицима која су улагачи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 особљу, запосленом код улагача т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да уђу и остану на њеној територији у сврху бављења активностима везаним за улагање.

Здравље, безбедност и мере заштите животне средине

Члан 10.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су сагласне да се улагања неће подстицати умањењем мера које се односе на здравље, безбедност или заштиту животне средине. Сходно том е,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се неће одрећи или на други начин одступити, или понудит

и одрицање или на други начин одступање од таквих мера да би подстакла улагања на територији њене државе.

Друштвена одговорност

Члан 11.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подстицати привредна друштва, која послују на територији њене државе, да у оквиру свог пословања и унутрашње политике добровољно примене међународно признате стандарде друштвено одговорног пословања које су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одобриле или подржале. Ови принципи односе се на питања као што су рад, животна средина, људска права и борба против корупције.

Решавања спорова између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Члан 12.

1. Спорови између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у вези са тумачењем или применом овог споразума решаваће се, по могућности, консултацијама и преговорима.

2. Ако се спор не може решити у року од стоосамдесет (180) дана од дана када је примљен писани захтев за решавање, он ће, на захтев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бити поднет *ad hoc* арбитражном суду у складу да одредбама овог члана.

3. Тај *ad hoc* Арбитражни суд ће се конституисати за сваки појединачни случај, на следећи начин: у року од шездесет (60) дана од дана пријема писменог захтева за арбитражу,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именовати по једног члана *ad hoc* Арбитражног суда. Ова два члана ће потом изабрати трећег члана - држављанина треће земље који ће уз сагласност об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бити именован за председника *ad hoc* арбитражног суда. Председник ће бити изабран у року од шездесет (60) дана од дана именовања прва два члана.

4. Ако се у роковима утврђеним у ставу 3. овог члана не изврше неопходна именовања,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затражити од председника Међународног суда правде да обави потребна именовања. Ако је председник Међународног суда правде држављанин државе једне или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ли ако је на други начин спречен да обави ову функцију, затражиће се од потпредседника Међународног суда правде да изврши потребна именовања. Ако је потпредседник Међународног суда правде држављанин државе једне или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ли ако је и он спречен да обави ову функцију, следећи по старешинству члан Међународног суда правде, који није држављанин државе ниједне од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биће позван да изврши потребна именовања.

5. Ad hoc Арбитражни суд доноси одлуке већином гласова. Одлуке су коначне и обавезујуће за об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6. Арбитражни суд утврђује свој начин рада.

7.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ће сносити трошкове учешћа свог арбитра и својих представника у арбитражном поступку. Трошкове председника и преостале трошкове подједнако ће сносити об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Ad hoc Арбитражни суд може својом одлуком наложити да једн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сноси већи део трошкова и оваква одлука ће бити обавезујућа за об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Решавање спорова између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 улагача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Члан 13.

1. Овај члан се примењује на спорове између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у вези са наводним кршењем обавеза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по основ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које за последицу има наношење штете или губитка улагачу или његовом улагању.

2. Овај члан се не примењује на чл. 10. и 11. овог споразума.

3. Ови спорови решаваће се, уколико је могуће, преговорима и консултацијама. Уколико се тако не могу решити у року од стоосамдесет (180) дана од дана пријема писменог захтева за покретање спора, улагач може изабрати да поднесе спор на решавање, у смислу тачке 6. овог члана:

- (а) надлежном суду или управном органу држав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на територији чије државе је извршено улагање;
- (б) арбитражи у складу са одредбама:

- (i) Конвенције о решавању инвестиционих спорова између држава и држављана других држава (*ICSID* Конвенција);
 - (ii) Правила додатних олакшица Међународног центра за решавање инвестиционих спорова (Правила додатних олакшица *ICSID-a*), ако је за обе стра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могућа примена Правила додатних олакшица *ICSID-a*;
 - (iii) *ad hoc* арбитражном суду састављеном од три члана, основаном у складу са Арбитражним правилима Комисије Уједињених нација за трговинско право (*UNCITRAL*); или
 - (iv) другој арбитражној институцији или по другим арбитражним правилима уколико постоји сагласност об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 (ц) Осим ако с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другачије не договоре, правила Комисије Уједињених нација за међународно трговинско право о транспарентности у арбитражама између улагача и државе („*UNCITRAL* Правила о транспарентности”) неће се примењивати на арбитраже покренуте у складу са чланом 13. став 3. тачка (б) подтачка (3) овог споразума.

4.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су сагласне да се спор може поднети међународној арбитражи у складу са процедурама прописаним у овом споразуму. Сагласност и подношење захтева за арбитражу, у складу са овим чланом треба да испуњавају услове:

- (а) Поглавља II *ICSID* Конвенције (надлежност Центра) и Правила додатних олакшица *ICSID-a* у погледу писмене сагласности Страна у спору; и
- (б) Члана II Конвенције о признавању и извршењу страних арбитражних одлука (у даљем тексту: Њујоршка конвенција) за споразуме у писаној форми.

5. Избор улагача да покрене спор на решавање пред судом или управним органом држав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у односу на коју покреће спор, или у складу са арбитражним механизмом предвиђеним ставом 3. овог члана, је коначан.

6. Независно од става 5. овог члан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у току арбитражног поступка, поднети судовима опште надлежности или управним судовима захтев за изрицање привремене мере ради заштите својих права и интереса, који не садржи накнаду штете, у складу са одредбама става 3. тачке (б) овог члана, до доношења коначне одлуке арбитражног суда.

7.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поднети захтев за арбитражу у року од деведесет (90) дана од дана пријема обавештења о намери да се спор поднесе арбитражи. Писмено обавештење о намери да се спор поднесе арбитражи садржи:

- (а) име и адресу подносиоца захтева и, када се захтев подноси у име привредног друштва, назив, адресу и место његовог оснивања;
- (б) за сваки захтев, навођење одредбе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за коју сматра да је прекршена или друге релевантне одредбе;
- (ц) опис правног и фактичког основа тужбе; и
- (д) одштетни захтев, укључујући приближан износ накнаде који се тражи.

8. Спор се подноси арбитражи најкасније у року од три (3) године од дана када је улагач први пут стекао или би требало да стекне сазнање о догађајима који су разлог спора.

9. Одредбе друге реченице става 3. овог члана не примењују се на мере из члана 18.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Када улагач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поднесе тужбу арбитражи у складу са ставом 3. овог члана, а тужена страна се позове на члан 18.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примењују се следеће одредбе:

- (а) Тужена страна ће, у року од стодвадесет (120) дана од дана подношења тужбе арбитражи, у складу са овим чланом, поднети писмени захтев *ad hoc* Заједничкој комисији, коју су основал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ради заједничког одлучивања да ли је и у којој мери члан 18.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основа за одбрану захтева. Копију захтева тужена страна ће без одлагања доставити арбитражи, уколико је конституисана. Поступак по тужби се наставља уколико су испуњени услови из тачке (д) овог става;
- (б) *Ad hoc* Заједничка комисија ће бити основана на захтев тужене стране која се позива на члан 18.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Заједничка комисија је састављена од владиних представника које именују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 (ц) *Ad hoc* Заједничка комисија ће покушати, у доброј вери, да донесе одлуку на начин који је прописан у тачки (а) овог става. Одлука ће без одлагања бити уручена странама у спору и, уколико је основан, арбитражном суду. Одлука је обавезујућа за арбитражни суд.
- (д) Ако *ad hoc* Заједничка комисија, у року од деведесет (90) дана од дана пријема писменог захтева тужене стране за доношење одлуке у складу са тачком (а) овог става, не донесе одлуку описану у овој тачци, одлуку ће донети арбитражни суд за питања која су остала нерешена од стране *ad*

нос Заједничке комисије;

(е) Арбитражни поступак из тачке (а) овог става ће бити обустављен до доношења одлуке од стране Заједничке комисије и може се наставити у односу на захтев:

- (i) по истеку рока од десет дана од да уручења одлуке Заједничке комисије странама у спору и, уколико је конституисан, арбитражном суду; или
- (ii) по истеку рока од десет дана од истека рока од деведесет (90) дана из тачке (д) овог става.

10. Стране у спору се могу договорити о месту одржавања арбитраже на основу арбитражних правила која се примењују у складу са ставом 3. тачка (б) овог члана. Ако се стране у спору не договоре, суд ће одредити место у складу са применљивим арбитражним правилима, с тим да то место буде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која је чланица Њујоршке конвенције.

11.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не може изјавити у своју одбрану противтужбу или тражити поравнање истицањем да је добила или да ће добити, по основу осигурања или уговора о гаранцији, обештећење или другу накнаду, за цео или део износа настале штете.

12. Арбитражни суд ће у својој одлуци навести законе и чињенице, заједно са разлозима којима се водио при доношењу одлуке, и може, на захтев стране у одлуци обезбедити:

- (а) изјаву да је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пропустила да испуни своју обавезу у складу са овим споразумом;
- (б) новчану накнаду, која ће обухватати камату од дана када је штета настала до дана исплате;
- (ц) у одређеним случајевима, повраћај у натури, обезбеђујући д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платити новчану накнаду ако повраћај у натури није могућ; и
- (д) други облик накнаде, уз сагласност страна у спору.

13. Арбитражна одлука је коначна и обавезујућа за обе стране у спору. Свак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е ће, на територији своје државе, обезбедити извршење арбитражне одлуке, без одлагања.

Примена других одредаба

Члан 14.

Ако национално законодавство неке од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односно обавезе из међународног права које постоје или могу настати између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у складу са овим Споразумом, садрже одредбе опште или посебне природе, којима се улагањима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даје третман који је повољнији од третмана који се обезбеђује овим споразумом, такве одредбе ће, у мери у којој су повољније, имати предност над овим споразумом.

Примена споразума

Члан 15.

1. Овај споразум ће се примењивати од датума његовог ступања на снагу на улагања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звршена у складу са њеним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од стране улагача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а односиће се на улагања извршена пре као и после његовог ступања на снагу.

2. Споразум се неће примењивати на спорове који произилазе из догађаја који су се десили или на потраживања која су настала пре његовог ступања на снагу.

Ускраћивање погодности

Члан 16.

1.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улагачу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ада је то правно лице, и његовом улагању ускратити погодности које пружа овај споразум ако је то правно лице у власништву или је контролисано посредно или непосредно од стране лица из треће земље која није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која ускраћује погодности усвоји и примени мере којима забрањује трансакције са правним или физичким лицем из те треће земље тако да би се давањем погодности из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прекршила или се не би применила та мера у односу на правно лице или његово улагање.

2.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улагачу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је је

правно лице, и његовом улагању ускратити погодности које пружа овај споразум ако улагач нема претежну пословну активност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Тумачење Споразума

Члан 17.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ће се консултовати и на захтев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дати тумачење у вези са било којом одредбом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ако између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или између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 улагача државе друг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настане спор који се односе на тумачење овог споразума. Тумачење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договорено између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биће обавезујуће за судове из чл. 12. и 13.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Изузеци за финансијске услуге

Члан 18.

1. У вези са применом финансијских услуга на улагања извршена на територији држав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овај споразум не спречава ту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да усвоји или примењује разумне мере предострожности, укључујући заштиту улагача, депозитара, осигураника или лица којима финансијске институције дугују фидуцијарну обавезу или ради обезбеђивања интегритета и стабилности финансијског система. Ако мере нису у складу са одредбама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оне се неће користити као средство за избегавање обавеза и дужности.

2. Овај споразум се не примењује на недискриминаторне мере општег карактера које се односе на монетарну и кредитну политику или политику девизног курса донету од стране надлежних органа држав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3. Изузетно од члана 6. овог споразум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може, у доброј вери и на праведан и недискриминаторан начин, спречити или ограничити трансфер финансијској институцији за или у корист огранка или лица повезаних са том институцијом или снабдевача, применом мера које се односе на одржавање безбедности, бонитета, поузданости или финансијске одговорности финансијских институција. Ради веће прецизности, овај став не

прејудицира било коју другу одредб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који може дозволити Страни уговорници да ограничи трансфер.

4. Ради веће прецизности, одредбе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неће се тумачити у смислу да спрече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да усвоји или примени мере које су неопходне да се обезбеди усклађеност са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а које нису у супротности са овим споразумом, укључујући и оне које се односе на спречавање превара и обмана или које се баве последицама неизвршавања уговора о финансијским услугама, уколико мера не представља произвољно или неоправдано дискриминаторно средство између држава где слични услови преовлађују или постоји прикривено ограничење улагања у финансијским институцијама.

Безбедносни изузеци

Члан 19.

Ништа у овом Споразуму неће:

- (а) обавезивати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да достави или дозволи приступ информацијама ако сматра да би њихово објављивање било супротно са њеним основним интересима безбедности;
- (б) спречавати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да предузима радње које сматра потребним ради заштите основних интереса безбедности;
 - (i) у вези трговине оружјем, муницијом и ратном опремом, прометом и трансакцијама других роба, материјала, услуга и технологија који се предузимају, посредно или непосредно, ради снабдевања војне или друге безбедносне институције,
 - (ii) предузетих у време рата или у другим ванредним ситуацијама у међународним односима, или
 - (iii) у вези спровођења националне политике или међународних споразума у погледу неширења нуклеарног оружја или других нуклеарно експлозивних направа;
- (ц) спречавати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да испуњава своје обавезе у складу са Повељом Уједињених нација ради очувања међународног мира и безбедности.

Пореске мере

Члан 20.

1. Овај споразум се не примењује на пореске мере, осим мера наведених у овом члану и члану 5. овог споразума.

2. Члан 5.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примењује се на све пореске мере, осим ако подносилац захтева, који тврди да пореска мера обухват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поднесе у складу са чл. 12. и 13.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захтев арбитражи. Захтев арбитражи се може поднети само ако:

(а) подносилац захтева, у писаној форми, упути надлежним пореским органима држав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питање да ли пореска мера обухват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и

(б) у року од 180 дана од датума упућивања захтева из подтачке а), надлежни порески органи држав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не постигну сагласност о томе да пореска мера не представљ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2. За потребе овог члана, „надлежни порески органи” су, за Републику Кореју, Министарство планирања и финансија - Национална пореска управа и за Републику Србију, Министарство финансија - Пореска управа.

3. Овај споразум не утиче на права и обавез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је проистичу из пореских конвенција. У случају неслагања између одредби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и пореске конвенције, предност у примени има пореска конвенција. Да ли постоји неусклађеност између Пореске конвенције између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и овог споразума, утврђују искључиво надлежни органи на основу те конвенције.

Ступање на снагу, трајање и престанак важења Споразума

Члан 21.

1. Споразум ступа на снагу по истеку тридесет (30) дана од дана пријема последњег обавештења којим с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међусобно обавештавају о испуњењу услова предвиђених њихових национал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неопходних за ступање на снагу овог споразума.

2. Овај споразум се закључује на период од десет (10) година и аутоматски ће наставити да важи на неодређено време, осим ако једна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е писмено не обавести другу Страну уговорницу, најмање годину дана пре истека

рока важења споразума, о својој намери да раскине Споразум.

3. У погледу улагања која су извршена пре датума престанка важења споразума, одредбе чл. 1. - 20.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остају на снази у периоду од пет (5) година од дана престанка важења Споразума.

4. Овај споразум може бити измењен, уз обострану сагласност Страна уговорница. Измене и допуне овог споразума ступају на снагу у складу са истом правном процедуром предвиђеном ставом 1. овог члана. Свака измена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неће утицати на права или обавезе стечене или настале пре њеног ступања или раскида Споразума.

У ПОТВРДУ ЧЕГА су доле потписана лица, ваљано овлашћена од својих Влада, потписала овај споразум.

Потписано у два оригинала, у Сеулу дана 8. септембра 2023.године, сваки на корејском, српском и енглеском језику, с тим што су сви текстови подједнако аутентични. У случају било какве разлике у тумачењу, меродаван је текст на енглеском језику.

ЗА ВЛАДУ РЕПУБЛИКЕ КОРЕЈЕ

ЗА ВЛАДУ РЕПУБЛИКЕ СРБИЈЕ

Анекс I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потврђују свој заједнички став да:

1. поступак или низ поступака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не представљ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осим ако се њима не угрожавају материјална и нематеријална права улагања.
2. Члан 5.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односи се на две ситуације. Прва је непосредн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када је улагање национализовано или на други начин непосредно експроприисано кроз формални пренос права својине или трајне заплене.
3. Друга ситуација на коју се односи члан 5. овог споразума је посредн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када поступак или низ поступака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ма једнако дејство као директн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без формалног преноса права својине или трајне заплене.
 - (а) Утврђивање да ли поступак или низ поступака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у конкретном случају представља посредну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врши се од случаја до случаја, на чињеницама заснованој истрази, која поред осталих елемената обухвата и:
 - (i) економски утицај државних мера, иако сама чињеница да поступак или низ поступака једне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има, сама по себи, супротан ефекат на економску вредност улагања не значи да је посредн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извршена,
 - (ii) обим у којој поступак или низ поступака утиче на различита, разумна очекивања у односу на улагања. Ради веће прецизности, да ли су очекивања улагача у погледу очекиваних резултата улагања разумна или не зависе делом и од природе и обима владиних регулатива у релевантном сектору, и
 - (iii) природу поступка или низа поступака владе, укључујући њихову циљ и садржину. Релевантна разматрања могу обухватати и чињеницу да ли поступак државе намеће већи терет појединачном улагачу или улагању од очекиваног, поднетог у јавном интересу.
 - (б) Изузетно, када је активност или низ активности озбиљна или несразмерна у односу на њену намену или дејство, недискриминаторна мера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ја је прописана и примењена да би се заштитили легитимни јавни интереси, као што су здравље, безбедност, животна средина и

стабилизација цена некретнина, не представља посредну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Ради веће прецизности, листа „легитимних јавних интереса”, није коначна.

4. Појам посредне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е није намењен оспоравању владиних мера, усвојених у вршењу легитимних циљева Стране уговорнице, која би иначе била у супротности са другим одредбама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Анекс II

Опорезивање и експропријација

Утврђивање да ли пореска мера у конкретној ситуацији представљ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врши се од случаја до случаја, на чињеницама заснованој истрази, која узима у обзир све релевантне елементе у вези улагања, укључујући и елементе садржане у Анексу I овог споразума као и чињеницу да:

- (а) наметање пореске обавезе не представљ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Увођење или наметање нове пореске мере у више од једне области у погледу улагања не представљ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 (б) пореска мера, која је у складу са међународно признатим принципима пореске политике и праксе, не би требало да представљ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Нарочито, пореске мере, које имају за циљ спречавање избегавања плаћања пореза или утају пореза, не представљају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 (ц) пореска мера која се примењује на недискриминационој основи, за разлику од пореских мера које су усмерене на улагаче одређене националности или према одређеним пореским обвезницима, не представљају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и
- (д) општа пореска мера не представља експропријацију ако је важила у моменту улагања и била јавно доступна.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RBI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r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greater investments by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Recognizing that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will be conducive to the stimulation of individual business initiatives and will increase prosperity in both States, and

Desiring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consumer protection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taking note of the need to ensure the attainment of legitimate governmental objectives to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investment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including, though not exclusively:

- (a) an enterprise (being a juridical person or any other entity constituted or organized under the applicable law of the host Contracting Party,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 or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and includes a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branch,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organization);
- (b) shares, stock, and other forms of equity participation in an enterprise;
- (c) bonds, debentures, other debt instruments, and loans;
- (d)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 (e)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concession, revenue-shar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other similar contracts,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whereof the investment is made;

- (f) claims to money, related with an investment, under a loan contract;
- (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h) licenses, authorizations, permits, and similar rights conferred pursuant to domestic law; and
- (i)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leases, mortgages, liens, and pledges. For greater certainty, market share, market access, expected gains, and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 are not, by themselves, investment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vestment” does not mean:

- (a) a claim to a payment that arises solely from the commercial sale of goods and services, unless it is a loan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 (b) an order or judgment entered in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In order to qualify as an investment, an asset mus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such as the commitment of capital or other resources, the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 or the assumption of risk. A change in the form in which assets are invested shall not affect their characteristics as investments.

2. “investor” means any natural or juridical person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invest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 (a) “natural person” means a natural person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provided, however, that a natural person who is a dual national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the State of his or her dominant and effective nationality; and
- (b) “juridical person” means any entity, whether or not for profit, such as a company, public institution, authority, foundation, partnership, firm, establishment, organizati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incorporated or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3. “revenues” means the amounts yielded by an investment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profit, capital gains, dividends, interests, royalties and similar fees arising from investments.

4. “territory” means:

(a) Concerning the Republic of Serbia:

The area over which the Republic of Serbia exercise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and

(b) Concern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ove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exercise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s over 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5. “freely usable currency” means any currency th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etermines in accordance with its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amendments thereto.

6. “financial service” means any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 Financial services include all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and all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as well as services incidental or auxiliary to a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

Article 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and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make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and shall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3.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investments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e obligations in paragraph 2 to provide:

-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Contracting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4.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5.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n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against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and disposal of investments by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nor impos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on investment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local content, technology transfer or 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3

Treatment of Investment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in its territory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st-favored-natio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rable.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in its territory to invest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rable.

3. The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 (a) government procurement; or
- (b)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Contracting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4.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relate to privileges which either Contracting Party accords to investors of third States on account of its present or future membership of, or association with, a customs or economic union, a common market or a free trade area or a similar international agreement establishing such unions or other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or any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relating wholly or mainly to taxation.

5. For greater certainty,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rticle 13 of this Agreement.

Article 4

Compensation for Losses

1.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whose investments suffer losses owing to war or other armed conflict,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revolt, insurrection, riot or other similar situ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restitution,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other forms of settlement,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which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2.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in any situation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uffer loss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sulting from:

- (a) requisitioning of their property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s forces or authorities; or
- (b) destruction of their property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s forces or authorities which was not caused in combat action or was not required by the necessity of the situation,

shall be accorded restitution, compensation, or both, as appropriate, for such losses. Any compensation shall be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mutatis mutandis*.

Article 5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1. Neither Contracting Party may expropriate or nationalize an invest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ropriation”), except:

- (a) for a public purpose;
- (b)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 (c) 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 (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2.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shall:

- (a) be paid without delay;
-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
- (c)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and
- (d) be fully realizable and freely transferable.

3.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freely usable currency,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shall be no less than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plus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4.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currency that is not freely usable,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 converted into the currency of payment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e date of payment – shall be no less than:

- (a)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converted into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at date, and
- (b)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freely usable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5.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affected by expropriation shall have a right to prompt review by a judicial or other independ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ir case and of the valuation of their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Article.

6.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the issuance of compulsory licenses grante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7. This Article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Article 6

Transfer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uarantee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free transfer of all payments relating to an investment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Such transfers shall include,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 (a) the initial capital and additional amounts to maintain or increase an investment;
- (b) the amounts yielded by investments including,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profits, interest, capital gains, dividends, royalties and all kinds of fees;
- (c) payments made under a contract including a loan;
- (d) proceeds from the sale or liquidation of all or any part of an investment;
- (e) payments made pursuant to Article 4 and Article 5;
- (f) payments arising out of the settlement of a dispute under this Agreement; and
- (g) earnings and other remuneration of personnel engaged from abroad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2. All transfer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a freely usable currency, without undue restriction or delay, at the market exchange rate applicable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the investment has been made on the date of transfer.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 Contracting Party may delay or prevent a transf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measures and laws relating to:

- (a) bankruptcy, insolvenc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 (b) issuing, trading or dealing in securities;
- (c) criminal or penal offenses;
- (d) financial reporting or record keeping of transfers when necessary to assist law enforcement or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or
- (e) ensuring compliance with orders or judgments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4. A Contracting Party may adopt or maintain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 (a) in the event of serious balance-of-payments or external financial difficulties or the threat thereof; or
- (b) in cases wher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movements of capital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difficulties for macroeconomic management, in particular,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5.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 (a) not exceed a period of one year; however, if extremely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e such that a Contracting Party seeks to extend such measures,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coordinate in advance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ny proposed extension;
- (b) be consistent with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c) be non-discriminatory;
- (d) not exceed those necessary to deal with the circumstances set out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 (e) be temporary, and be eliminated as soon as conditions permit;
- (f) not be confiscatory;
- (g) promptly be notified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 (h) not constitute a dual or multiple exchange rate practice;
- (i) not restrict payments or transfers for current transactions, unless the imposition of such measures complies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 (j) not restrict payments or transfers associated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Article 7

Subrogation

1. If a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makes a payment under an indemnity, guarantee or contract of insurance given in respect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that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cognize:

- (a) the assignment of any right or claim of such investor to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and
- (b) the right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to exercise by virtue of subrogation any such right and claim to the same extent as its predecessor in title.

2. The investor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recluded from pursuing such rights and claims arising therefrom to the extent of the subrogation.

3. Article 6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that exercise rights and claims of the investor by virtue of subrogation.

Article 8

Transparency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mptly publish, or otherwise make publicly available, its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and judicial decisions of general applic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agreements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Where a Contracting Party establishes a policy which is not expressed in its laws or regulations or by any other means listed in this paragraph, but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promptly publish them or otherwise make them publicly available.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mptly respond to specific questions and provide, upon request, inform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one Contracting Party from requiring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ts investment, to provide routine information concerning that investment solely for informative or statistical purposes. Nothing in

this Agreement requires a Contracting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 (a)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inancial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f particular investors or investments; or
- (b)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concerning particular investors or investments,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be contrary to its laws and regulations protecting confidentiality or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a particular enterprise or individual.

Article 9

Entry and Sojourn of Personnel

Subjec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ntry and sojourn of aliens, a Contracting Party shall permit natural persons who ar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personnel employed by investor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to enter and remain in its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activities connected with investment.

Article 10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Measures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investment by relaxing domestic measures regarding health, safety or environment. Accordingly, a Contracting Party should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those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of an investor in its territory.

Article 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ach Contracting Party should encourage enterprises operating within its territory to voluntarily incorporat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ir practices and internal policies, such as statements of principle that have been endorsed or are supported by the Parties. These principles address issues such as labor,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anti-corruption.

Article 12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1.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if possible,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2. If any dispute cannot be settled within one hundred and eighty (18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written request for settlement, it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to an ad hoc Arbitral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3. Such an ad hoc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for each individual case in the following way: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request for arbitra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ppoint one member of the ad hoc Arbitral Tribunal. These two members shall then select a national of a third State, who on approval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appointed Chairperson of the ad hoc Arbitral Tribunal. The Chairperson shall be appointed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ointment of the other two members.
4. If the necessary appointments have not been made within the periods specified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 request may be made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make such appointments. If the President is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otherwise prevented from discharging the said function, the Vice-President shall be invited to make the appointments. If the Vice-President is also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prevented from discharging the said function, the member, next in seniority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o is not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s not otherwise prevented from discharging the said function shall be invited to make the appointments.
5. The ad hoc Arbitral Tribunal shall reach its decision by a majority of votes. Such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both Contracting Parties.
6. The ad hoc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

7.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its own arbitrator and its representation in the arbitral proceedings. The costs of the Chairperson and any remaining costs shall be borne in equal parts by the Contracting Parties. The ad hoc Arbitral Tribunal may, however, in its decision direct that a higher proportion of costs shall be borne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is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3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1. This Article applies to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alleged breach of an obligation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under this Agreement which causes loss or damage to the investor or its investment.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rticle 10 and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3. Such a dispute should, if possible, be settled by negotiations or consultations. If it is not so settled within one hundred and eighty (18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has been raised with written request by either party, the investor may choose to submit it for resolution, subject to paragraph 6 of this Article:

- (a) to any competent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investment has been made;
- (b)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under:
 - (i)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the “ICSID Convention”);
 - (ii) the Additional Facility Rules of the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f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are available;
 - (iii) an ad hoc arbitral tribunal composed of three member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 (iv) if agreed by both parties to the dispute,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any other arbitration rules.
- (c) Unless the Contracting Parties otherwise agre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UN Doc A/CN.9/783)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shall not apply to arbitrations initiated pursuant to paragraph 3(b)(iii) of Article 13.

4.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the submission of a dispute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The consent and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of:

- (a) Chapter II of the ICSID Convention (Jurisdiction of the Centre) and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with regard to the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 (b) Article II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ew York Convention”) for an “agreement in writing.”

5. Once the investor has submitted the dispute to either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f the disputing Contracting Party or any of the arbitration mechanism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choice of the procedure shall be final.

6. The seeking of interim relief not involving the payment of damages, from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by a party to a disput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Article, for the preservation of its rights and interests pending resolution of the dispute, is not deemed a submission of the dispute for resolution for purposes of a Contracting Party's limitation of consent under paragraph 5 of this Article, and is permissible in arbitration under any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b) of this Article.

7. A dispute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notice of intent to do so was received by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party to the dispute. Written notice of intent shall specify:

-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aimant and, where a claim is submitted on behalf of an enterprise, the name, address, and place of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 (b) for each clai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lleged to have been breached and any other related provisions;
- (c) the legal and factual basis for each claim; and
- (d) the relief sought, including the approximate amount of any damages claimed.

8. A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no later than three (3) years from the date the investor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acquired knowledge of the events which gave rise to the dispute.

9.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 measure of a Contracting Party that fall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8. Where an investor of a Contracting Party submits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d the respondent invokes Article 18 as a defense,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 (a) the respondent shall, within one hundred and twenty (120) days of the date the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Article, submit in writing to the ad hoc Joint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two Contracting Parties, a request for a joint determination on the issue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Article 18 is a valid defense to the claim. The respondent shall promptly provide the tribunal, if constituted, a copy of such request. The arbitration may proceed with respect to the claim only as provided in subparagraph (d);
- (b) the ad hoc Joi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by the request of the responding Contracting Party invoking the defense referred in Article 18 and will be composed of Governmental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the two Contracting Parties;
- (c) the ad hoc Joint Committee shall attempt in good faith to make a determination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ny such determination shall be transmitted promptly to the disputing parties and, if constituted, to the tribunal. The determination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 (d) if the ad hoc Joint Committee, within ninety (90) days from the date it has received the respondent's written request for a determination under subparagraph (a), has not made a determination as described in that subparagraph,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 left unresolved by the ad hoc Joint Committee;
- (e) the arbit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be suspended during the pendency of the deliberation by the ad hoc Joint Committee and may proceed with respect to the claim:
 - (i) ten (10) days after the date the determination of the ad hoc Joint Committee has been received by the disputing parties and, if constituted, the tribunal; or
 - (ii) ten (1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90 day period extended to the ad hoc Joint Committee in subparagraph (d).

10.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on the legal place of any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l rules applicable under paragraph 3(b) of this Article. If the disputing parti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determine th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rbitral rules, provided that the place shall b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11. A Contracting Party shall not assert as a defense, counter-claim, right of set-off or for any other reason, that indemnification or other compensation for all or part of the alleged damages has been received or will be received pursuant to an indemnity, guarantee or insurance contract.

12. The arbitral tribunal, in its award, shall set out its findings of law and fact,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its ruling and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provide the following forms of relief:

- (a) a declaration that the Contracting Party has failed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 (b) pecuniary compensation, which shall include interest from the date the loss or damage was incurred until the date of the payment was or will be made;
- (c) restitution in kind in appropriate cases, provided that the Contracting Party may pay pecuniary compensation in lieu thereof where restitution is not practicable in the good faith judgment of the responding Contracting Party; and
- (d)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y other form of relief.

13. Arbitration award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an award in its territory.

Article 14

Application of Other Rules

I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existing at present or established hereafter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 addition to this Agreement contain provisions, whether general or specific, entitling investment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a treatment more favorable than is provided for by this Agreement, such provisions shall, to the extent

they are more favorable, prevail over this Agreement.

Article 15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1.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to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made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ether prior to,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claims arising out of events which occurred, or to claims which had been settled,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Article 16

Denial of Benefits

1. A Contracting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of such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persons of a non-Contracting Party, directly or indirectly, own or control the juridical person and the denying Contract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Contracting Party or a person of the non-Contracting 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juridical person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were accorded to the juridical person or its investments.
2. A Contracting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that juridical person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7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and issue interpretation with regard to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upon request of a Contracting Party, if a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r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arises. The interpretations of this Agreement agre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binding on tribunals established under the Article 12 and Article 13.

Article 18

Exceptions on Financial Services

1.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by an investment, th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Contracting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such provisions.
2. Nothing in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by an investment, applies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aken by any public ent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3. Notwithstanding Article 6, a Contracting Party may prevent or limit transfers by a financial institution to, or for the benefit of, an affiliate of or person related to such institution or suppli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measure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greater certainty, this paragraph does not prejudice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at may permit a Contracting Party to restrict transfers.
4.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9

Security Excep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 (a) to require a Contracting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 (b) to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 (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and transactions in other goods, materials, services and technology undertake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or other security establishment,
 - (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 (iii)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respecting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 (c) to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20

Taxation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rticl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impose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axation measures, except in Article 5.

2. Article 5 shall apply to all taxation measures, except that a claimant that asserts that a taxation measure involves an expropriation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2 or Article 13 only if:

- (a) the claimant has first referred to the competent tax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in writing the issue of whether that taxation measure

involves an expropriation; and

- (b)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such referral, the competent tax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fail to agree that the taxation measure is not an expropriation.

3.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competent tax authorities” means,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National Tax Service and for the Republic of Serbia, Ministry of Finance, Tax administration.

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under any tax conven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such convention, that convention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In the case of a tax conven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at convention shall have sole responsibility for determining whether any inconsistency exists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at convention.

Article 21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en (10) years and shall remain in force thereafter indefinitely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one (1) year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3. In respect of investments made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s 1 to 20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further period of five (5) years from the date of its termination.

4. The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egal procedure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y such amendm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ed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r obligations accruing or incurred under this Agreement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amendment or termin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eighth day of September 2023, in the Korean, Serb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RBIA

Annex I

Expropri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1.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can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unless it interferes with a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 in an investment.
2. Article 5 addresses two situations. The first is 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investment is nationalized or otherwise directly expropriated through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3. The second situation addressed by Article 5 is in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has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 (a)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 (i) 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although the fact that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of an investment, standing alone,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 (ii)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an investor's expectation regarding governmental regulations is reasonable or not, depends in part on the character and the extent of governmental regulation in relevant sector; and
 - (iii)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including its objectives and context. Relevant considerations could include whether the government action imposes a special sacrifice on the particular investor or investment that exceeds what the investor or investment should be expected to endure for the public interest.
 - (b)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for example, when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in light of its purpose or effect,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that are

designed and appli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and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 For greater certainty, the list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is not exhaustive.

4.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is not intended to impugn a governmental measure adopted in the exercise of legitimate regulatory authority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is otherwise consistent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nex II

Taxation and Expropriation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taxation measure,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the factors listed in Annex I and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 (a) the imposition of taxes does not generally constitute an expropriation. The mere introduction of a new taxation measure or the imposition of a taxation measure in more than one jurisdiction in respect of an investment generally does not in and of itself constitute an expropriation;
- (b) a taxation measure tha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tax policies, principles, and practices should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n particular, a taxation measure aimed at preventing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ation measures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 (c) a taxation measure that is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s opposed to a taxation measure that is targeted at investors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at specific taxpayers, is less likely to constitute an expropriation; and
- (d) a taxation measure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f it was already in force when the investment was made and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 was publicly available.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4조 (손실 보상)	전쟁,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다른 계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신속,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함.
2	안 제5조 (수용과 보상)	다른 계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수용 혹은 국유화 하거나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 (손실 보상)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수용과 보상)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4조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손실에 대한 보상 금액 또한 각 사안마다 보상 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
- 안 제5조의 수용을 행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수용에 대한 보상 금액 또한 각 사안마다 보상 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

III.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경제협정규범과장	국제경제국장
이경화	이송주	김지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경화 외무사무관	02-2100-7717	kyhlee08@mofa.go.kr

/끝/